



◎ 기형적인 전기요금 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취임 직후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기로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물가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언제까지 몇 차례나 올릴 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현재의 요금수준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요금 인상을 뜻한다. 전기요금이 생산 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이나 시민단체 등이 전기요금 현실화에 반대하는 이유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요금 현실화에 나선 것은 고사하고 있는 전력, 에너지업계의 위기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전은 물가불안을 우려한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 때문에 최근 3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 3년 간 누적된 적자 규모만 3조1000억 원에 이른다. 그 결과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신규 설비투자는 물론 유지보수 등 대부분의 예산집행을 늦추거나 줄이고 있다. 하지만 그 여파는 고스란히 중전기, 전기공사 등 한전의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가 최근 들어 이들 업종에서의 부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전기요금 때문에 발생한 한전의 적자문제가 중소 협력회사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수요·공급법칙이 적용되는 요금결정 구조를 만들어 기형적인 전력산업의 요금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

◎ 한수원 본사 이전논란 격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도심권 이전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의 도심이전 재추진은 지난해 10월 이전부지가 자리하고 있는 양북면을 제외한 감포·양남지역 주민들이 경주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의회가 한수원 본사의 경주 도심권 이전에 대한 입장을 전격 발표하면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후 양북면과 그 외 지역 주민들이 원론 고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논리를 앞세우며 대립해 왔다. 그러다 지난달 최양식 경주시장이 본사 재배치라는 최종 입장을 내놓자 양북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당시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이 본사 이전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당당하고 책임감 있게 전면에서 나서라”며 “한수원 본사 위치는 기업의 경영측면과 지역경제, 행정적 측면이 조화롭게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현 한수원 본사 위치는 적절하지 않아 다른 적절한 곳으로 재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최 시장의 입장에 대해 양북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물리적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버리고 있는 형국이다.

LH본사 사례에서도 보듯이 최근 들어 지역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형 공기업의 이전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은 기존에 정부가 약속했던 계획,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문제될게 전혀 없다.

모두 약속을 어기고 정치적·지역적 논리에 따라 일을 풀어나가다 보니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KEA